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서재정 코넬대학 정치학과 교수

부시 행정부는 9·11이라는 초유의 테러공격을 미국 본토에서 당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전략 이행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채택한 세계전략은 '1-4-2-1'로 요약될 수 있고, 이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 중인 '군사변환'의 요체는 '10-30-30'으로 정리될 수 있다. 수수께끼와도 같은 이 숫자들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위상, 한미동맹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간략하게나마 이 숫자들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4-2-1전략'

부시 행정부는 2002년 5월 「방어계획 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채택하여 2001년 9·11 직후 발표된 「4개년 국방검토」에서 제기된 국방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전략을 '1-4-2-1 계획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여기서 △'1'은 미국 본토의 완전한 방어 △'4'는 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2'는 2개 지역전장에서의 "신속한 승리" △'1'은 1개 전장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기존의 양대전쟁은 '2'로 유지하면서, '1-4-1'을 추가하여 미군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4개년 국방검토」에서 제기된 다음의 과제들을 정식화하여 미 군사력 운용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미국 본토 방어: "미국 영토 밖에서 가해진 공

격으로부터 미국민과 영토 및 사활적 국방기간시설을 방어한다." 미국 본토 방어는 9·11 이후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어 북미주를 관할하는 사령부와 본토방위국의 신설을 가져왔고, 미사일방어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개 지역에서의 전진 억제: "유럽과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 아시아에 그 지역에 맞는 미군을 전진·주둔 배치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안심시키고, 적의 강제를 막아내며, 미국과 미군 및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한다." 4개 지역에 미군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있을지 모를 침략 및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국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을 힘으로 좌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군의 전진배치는 '안심'을 담보로 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미국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것도 목표로 한다.

△2개 주요전쟁 승리: "두 곳의 작전지역에서 중첩되는 시간대에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한다." 미군이 전진 배치되는 4개 지역 중 2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두 곳에 집중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전쟁 지역에 배치된 미군만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변환하여 배치지역에 상관없이 분쟁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집중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는 변화이다.

△1개 결정적 승리: "미군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두 개의 전구 중 한곳에서는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

키고 장차 있을 수 있는 미래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적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다. 명령을 받는다면 영토를 점령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조건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2'가 이라크와 북한을 지칭한다는 부분이다. 특히 양대전쟁전략이 수립될 때부터 지목된 양대주적 중 이라크에서는 정권교체와 점령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북한만 남은 셈인 것이다. “결정적 승리”를 지향하는 마지막 '1'과 관련하여 QDR과 「국방계획지침」은 미 대통령이 그 대상을 선택만 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사막의 늪'에 미군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북을 상대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 북을 겨누고 있는 한 한반도는 '2'와 '1'의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짜기 어려운 상대”로 인식되고 있다.

‘10-30-30 전략모드’

미국은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고,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10-30-30 전략모드'를 추진하고 있다. 양보다는 질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군을 개혁, 냉전시기의 구식군을 21세기 최첨단군으로 환골탈태하여 군의 신속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새로운 작전개념, 이와 걸맞은 군사조직이라는 삼박자를 결합하여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 계획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진두지휘 아래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우선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에 도입하여, 정확하면서도 살상력이 높고 이동배치가 용이하며 미군의 생존성을 높여

주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 무기체계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미사일방어체계이며, 육군용으로 개발된 스트라이커 장갑차군이다. 공군은 초음속폭격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음속의 8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게 될 이 폭격기는 5.5톤의 무기를 싣고 미국 본토에서 발진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2시간 이내에 치명적인 폭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첨단무기 개발과 함께 작전개념과 군대조직도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적과의 대치선을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는 기존의 개념을 버리고, 적의 지휘부와 지휘통제 체제를 우선적으로 공격한다는 작전으로 이행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적군에 대한 정보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적 타격에 쓸 수 있는 정밀무기와 실시간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군 구조도 이에 걸맞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스트라이커 여단인데, 장차 미 육군은 이를 더 발전시킨 미래전투무기체제로 무장된 '목적군'으로 재편하여 세계 어느 곳이던지 96시간 안에 투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군은 바다에 떠 있는 '해상기지'를 추진하여 미군기지가 없는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공군은 전 지구범위의 정찰과 공격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군은 이렇게 첨단무기+신작전+신조직의 삼위일체로 21세기 첨단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러한 첨단군이 지향하는 능력이 '10-30-30'이다. 즉 10일 이내에 세계 어느 곳이던지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30일 이내에 승리를 거두며, 이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분쟁에 투입될 준비태세를 갖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변화

현재 한미동맹의 목적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 재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1-4-2-1전략'과 '10-30-30 전략모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주한미군은 앞으로 역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며 “역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 작전이나 동북아평화 유지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군의 작전영역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주한미군의 작전반경이 전 세계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한국군마저도 한미동맹의 이름 아래 전 세계적인 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한국 국방부는 “한미연합군의 역할 확대는 사실이 아니며,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발뺌을 하고 “캠벨 중장도 ‘본인의 발언 내용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가정적인 발전방향을 예시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미연합사의 작전반경을 지역적 내지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 방어에서 세계분쟁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1990년대 초부터 진행시켜왔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10-30-30 전략모드에 힘이 실리면서 이러한 논의는 한·미 국방부간의 합의를 거쳐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파견되어 미군 지휘 하에 있으며 2004년 8월이면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 전쟁에 바로 투입된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인 군사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2004년 2월 24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하여 한반도와 북미 지역에 한정된 한국과 미국의 상호 군수지원 대상 지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한미동맹의 역할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조약당사국이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또 1954년 1월 19일 미 상원이 한미방위조약을 비준하면서 추가한 양해사항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조건을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으로 엄격히 제한한 바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작전을 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군 재조정이 한국의 안보이익과 합치하는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에 투입되고, 한국은 이러한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분쟁에 한국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군이 미군을 쫓아 아시아나 타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력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강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적 협력안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높다.